금남로에서

정재현

度 넘어선 지역 편중·차별 인사

이명박 정부의 지역 편중·차별 인사가 점입가경이다. 정부 요직은 물론 공기업, 금융회사 등 정부 입김이 통할만 한 곳이면 어디든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TK 출신이 아니면 민간기업 인턴 자리도 얻기 어렵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TK 편중 인사의 유탄이 호남출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내정자가 지난 5일 사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례나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성골·진골이 판치는 세상

KBO는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는 프로스포츠기구다. 그런데도 기를 쓰며 이 내정자를 반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장 내정자는 나주 출신이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1999~2006년 KBO 사무총장을 지낸 적이 있다. 호남출신으로 전 정권 인사라는 개인성향 때문에 승인을 거부당했다는 뒷말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황지우 시인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에서 물러났다. 구실이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총장직을 수행한 3년 동안 30차례에 걸쳐 280만원어치의 술값을 치킨집에서 썼다는 따위의 문화부 감사 내용 때문이다. 교수들과 함께한 1차례 술자리 비용이 10만원 이하다. 황지우는 교수직까지 박탈됐다. 그는 해남출신인데다 대표적 진보 시인이기도 하다. 그 역시 출신과 이념 성향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말이 떠돈다.

스포츠단체와 대학이 이럴진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실상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예를 보면 상층부 인사가 동향(同鄕)·동문(同門) 같은 사적인 연(緣)을 좇아 이뤄지면 닮은꼴 인사가 하층부 인사에까지 되풀이된다. 공무원 눈치에 이걸 모를 리 없다. 편중 인사의 영향은 사회 전반으로 번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유머 중 하나가 '출세하려면 성골(聖骨)이 되라'다. 성골은 '약속의 땅(TK)에 나서, 로열 유니버시티(고려대)를 나오고, MB지원 외곽조직(선진국민연대)에서 일한 사람이다. 괜찮은 자리 하나라도 얻으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진골(眞骨)이 돼야 한다 우스개도 뒤따른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과 통합이다. 사회문제에 좀처럼 나서지 않은 대학교수와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편파적이고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쇄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이념적으로 편향되면서 국민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끼리끼리만' 권력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는 '편중인사', 특정지역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차별인사'가 있다. 능력보다는 출신이 잣대가 되는 인사로는 어떤 소통도,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만사(萬事)인 인사가 망사(亡事)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작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첩경은 인적 쇄신에 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다시 존망(存亡)의 위기에 몰린다면 '지역 편중 또는 차별 인사'가 그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는 이 정권의 결단에 달렸다.

탕평인사가 곧 국민통합

토정비결을 썼던 이지함 선생은 만언소(萬言疏)에서 '해동청(海東靑)은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매이지만 새벽을 알리는 일에는 늙은 닭만 못하고 하루 천 리를 달린다는 한혈구(汗血駒)는 천하의 좋은 말이지만 쥐를 잡는 데는 늙은 고양이만 못하다'고 했다. 소질에 따른 적재적소 기용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 종족, 피부색깔, 종교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도 않는데 다만,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태어났느냐는 지극히 비본질적 차이 하나만으로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민심에 대못을 박아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쇄신 요구에 더 이상 오불관언(吾不關言) 해서는 안 된다. '국면전환용(局面轉換用)'제스처는 쓰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꽉 막힌 발상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국면의 전환이다. 과감한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 민심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이 정권이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길은 없다고 단언한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종교계까지 번진 시국선언 이젠 귀 열어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전국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 23개 대학 교수 725명도 9일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교수들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대학생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계와 문화계, 의료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종교계까지 번진 이번 시국선언은 무엇보다 민주주의 후퇴와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의 소통과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국정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같은 정치적 이벤트로 국면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대통령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국면전환용 개각 남발은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문제는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통령의 시국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의 민심 이반은 이 대통령 직계 의원들까지 '조각 수준의 국민통합형 개각'을 주장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마이 웨이'를 외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정국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심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

'사회 서비스 대학생 창업지원' 기대 크다

전남도가 추진해 온 '사회서비스 분야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직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열악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한다. 지자체의 노력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행과정에 기대가 크다.

전남도는 8일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회서비스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일자리 창출 대표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 39억원 등 총 56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회서비스분야 대학생 창업지원은 노인, 청소년,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총 14개 분야에 걸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남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고 서비스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졸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대졸자 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지난 1분기 전남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6.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생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대졸자 일자리 500여 개를 창출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제까지 열악한 경제여건만 탓하며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업에서 보듯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산학협동인 것이다.

은펜칼럼

옥영석

샐러리맨 Y의 일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에서 저녁 한 두 끼 먹기 힘든 샐러리맨 Y씨.

야근이며 회식, 각종 경조사에다 공과 사를 구분하기 힘든 모임들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아이가 깨어 있는 시간에 귀가하기도 싶지 않고, 어쩌다 일찍 들어오라는 아내의 애교 섞인 성화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주중에는 업무로 바쁘다지만 주말이면 결혼식에 동창회, 등산이며 동호인 모임에 나가고, 주중에 볼 수 없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려니, 일주일 동안 저녁의 반 이상은 외식이다. 가족들은 아내가 챙길 테니 남편은 밖에서 하는 일, 남 못지 않게 잘하면 그것이 가족사랑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큰 코를 다치게 마련. 몇 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중요한 모임을 마치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Y씨에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었다. "이런 바보.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묻는 아내가 한심하고 답답했다.

"당신은 말을 해야 아는 거야. 아님 모르는 체하는 거야"

그러나 아내는 전에 보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아이와 나를 위해 산다면서 왜 그렇게 밖으로만 도는 거죠? 오늘은 야근, 어제는 모임, 그제는 이직한 동료,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면서도 당신에겐 사람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바깥 일이 우선이잖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십여 년을 살아온 아내는 봇물 터지듯 쌓였던 불만을 쏟아 놓았다.

일을 위해 가족을 제쳐 놓는 상황을 당연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어 온 터라 한없이 서운하고 야속했지만, 아내의 얘기는 생각할수록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일과 모임을 핑계로 술에 취해 살아왔고, 어쩌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일찍 들어가기 멋 적어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 오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사람이 한 순간에 변하기는 어려웠다.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만나자는 사람마다 몇 번씩 같은 핑계를 대기도 어려웠고, 지난번 거절한 약속을 또 거절하기는 더 어려웠다.

결국, 주말의 반나절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하되, 수요일만은 일찍 귀가하기로 다짐했다. 집에서는 TV를 끄는 날로 정하고, 직장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식사를 하고, 윷놀이나 오목을 두었다.

공기놀이해본 지 삼십 년이 넘었어도 아이들 기분에 맞춰져 줄 수도, 이길 수도 있었고, 묵찌빠는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는 놀이라는 게 신기했다. 드라마를 끊어 봐야하는 아내에게나, 하필 수요일에 자주 열리는 축구중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 할 수 있었다.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아이들 일정이 더 바빠졌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이 몸부림을 기억해주리라 기대하면서, 올 여름엔 고스톱 정도는 가르쳐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 본다.

〈농협중앙회 차장·2005년 7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종필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 가정용 전기소비자들은 누진제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며, 기업에서는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저가정책 유지를, 정부는 요금 인상이 타 물가에 파급되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묵인하고 있으며, 고비용 설비에 대한 저비용 설비로 투자하는 것 마저 저해시키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은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화훼시설과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그리고 크레인, 열처리기 등을 사용하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들 수 있다. 등유, 경유, LNG 등 1차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여 난방을 하면 42%의 효율이 나오나 바로 난방했을 때는 80%의 효율이 나온다. 전기에너지 손실률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농사용과 산업용에 대한 저가정책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준 셈으로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 등 효율적인 유인책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싼 요금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결국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원유 값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3조 원 가까운 적자폭 중 7천억 원을 추경예산에서 보조해 줬다. 값싼 전기요금은 한편으로 전기 소비가 많은 분야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꼴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한전은 2천400여 명에 대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발전 자회사들에 대한 연료 통합구매를 하여 5천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시장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안을 경우 적자폭은 2조 7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계약 종별로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전력 전남본부장〉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 제거 나서야

블루길과 베스, 황소개구리가 우리 토종 생태계를 뒤흔들더니 이제는 그게 휴전선 비무장지대에까지 올라가 완전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한 최근 몇 년전부터는 오소리처럼 생긴 뉴트리아라는 커다란 동물이 습지와 우리나라 하천에 들어가 완전 토종처럼 자리잡고 정착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 토종과 결합해 어떤 변종을 탄생시킬지 모른다.

우리 토종 생태계가 갈수록 외래종에 점령당하는 요즘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린다. 사향 쥐라는 동물과 빗자루국화, 미국가막사리, 큰김의털이라는 식물이 급속히 확산돼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사향 쥐는 털과 가죽을 쓰고 애완동물로도 활용한다고 해서 들여온 건데 전국에 1만 마리가 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집 밖으로 버려지고 빠져나가 결국에는 하천과 습지의 수초와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쥐를 수입한 다른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생태교란 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대책도 없이 이미 전국에 1만 마리나 퍼져나갔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모른다.

환경당국에서는 이런 외래종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제거해서 블루길이나 베스, 황소개구리들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가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안영찬·보성군 미력면

원활한 차량 소통위해 하이패스 교육을

며칠 전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던 중 한 운전자가 실수로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와 헤매는 장면을 목격했다. 갑자기 차를 세우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하자 뒤따라 오던 차들이 빵빵대자 더욱 갈팡질팡했다. 그 순간 만약 급히 차를 옆으로 돌린다든가 후진을 할 경우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앞으로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 시험 때 하이패스분야를 시험과목으로 신설해서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이패스가 계속해서 일반화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차들이 하이패스를 장착할 것이다. 아예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이 출시될 거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하이패스 관련 내용을 시험 내용에 담아 미리 공부하게 한다면 톨게이트에서의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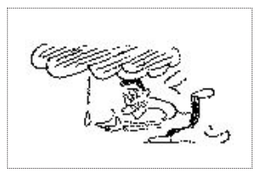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물 부족

물부족(Water Stress)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상수원의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식수난을 호소해오고 있다. 산간·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260여 개 마을은 시간·격일제 제한급수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광주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의 상수원인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때아닌 '물난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심해진 가뭄 때문에 저수율 감소추세가 기막히다. 평소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저수율은 각각 70%·50%대에 달한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 현재 39%·26%대로 곤두박질치더니, 급기야 6월 들어 10%대까지 줄어들었다.

8일 현재 동복수원지의 저수율은 14.4%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는 주암호도 16.3%로 떨어진 상태다. 6월에도 강우량이 찔끔거리는 수준에 그친다면,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했던 상상하기조차 싫은 '물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상황은 이처럼 심각한데도, 물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수원지에서 상수도를 통해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새는 누수율이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두 배인 25%에 달한다. 더욱이 진도·고흥·구례·해남·함평·곡성 등은 전남 누수율을 훨씬 웃돌아 35~48%를 넘나든다고 하니, 비에 인색한 하늘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낡은 수도관을 하루빨리 교체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써야 한다. 도서지역은 서둘러 정관을 개발하고, 빗물받이를 만들어 재활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물관리 역시 '사람 하기 나름'이라면, 지금쯤 대대적인 절약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물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